

## 전기요금 개편, ‘경제/환경/세대’ 정의를 바탕으로

박수택/SBS논설위원

전기요금에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해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오늘 국회 정책토론회는 경제와 사회, 에너지, 환경, 지역격차, 차별과 불평등, 정의, 공평, 배려, 미래세대 등 의 개념을 고루 짚어보며 우리나라 전력과 에너지 정책의 발전적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회로서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깊다.

우선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싸다는 사실은 곧 우리 사회 전반으로 절약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사실과 통한다. 전력 과소비 낭비 요소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산업부문 전기요금은 미국,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가장 싼 수준이다. 생산 원가를 밑도는 전력 요금을 산업 부문에 적용하는 이유로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우리 기업과 산업 체질을 약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기업들이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전력 사용 요금을 싸게 받는 만큼 비용은 줄고 이익은 늘어난다. 특히 전력 소비 비중이 높은 반도체 기계 장비, 화학, 자동차 부문은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출 주력 업종으로서 대기업들이 맡고 있다.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면 능력과 분수에 넘치는 이익이며, 이는 다른 부문이 취해야 할 것을 가로챈 것에 불과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농사용 전기 판매량은 3%에 불과하지만 총원가부족액의 36%나 차지하는 현실도 정의롭지 못하다. 유지비가 싼 만큼 수익을 늘리기 위해 기업 규모로 재배 온실 같은 전기 이용 시설을 늘리거나,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까지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반대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해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국민 대중의 전기 절약을 유도하고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산업 부문에 비해서는 차별을 받고 있음은 공평하지 못하다.

전력 생산은 국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기반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갈등 문제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력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연소로 온실가스 발생, 원전(핵발전)건설과 가동은 안전성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로 인해 국가 사회적인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에 따른 송배전 시설 건설은 추가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며, 특히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경관 훼손과 자연환경 파괴, 노선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 침해는 심각하다. 이인희 박사의 주제 발표는 '불편한 진실'을 상세히 짚어주고 있다. 전력 당국과 사업자들이 옆에 두고 참고해야 할 자료라고 생각한다.

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는 발전과 송배전 시설 건설과 유지 비용, 사용 에너지원의 시장 가격은 물론 사회적인 비용,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산입해야 마땅하다. 특히 원전의 경우 사용후 연료와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리 보관 저장 비용까지도 100% 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 가격을 축소 왜곡하는 결과를 빚고 미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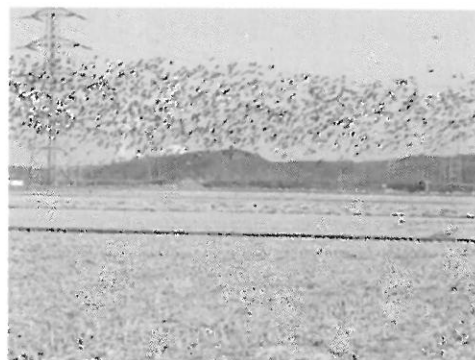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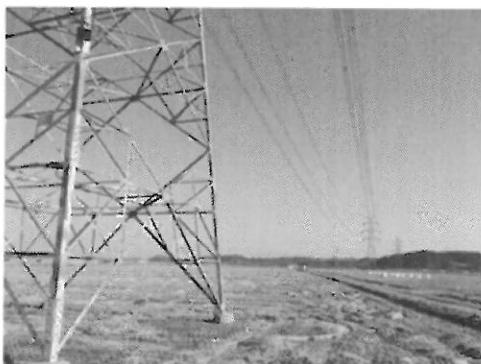
대로 처리 책임을 떠넘기게 된다.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이정호 박사가 제시한 바와 같이 송전혼잡, 송전손실을 지역별로 고려해 가격에 반영하고, 송전 이용 요금을 발전사에 부과하며, 송배전 원가도 소비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등의 지역별 가격 신호 제공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당장은 비용 부담이 늘어 반발은 받겠지만, 근원적으로 정의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로 인한 경제 사회적 비용이 높은 데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도시, 산업단지에서 열병합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도 일부 대안일 것이다. 원전이 경제적이고 깨끗하며 온실가스를 내지 않으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바로 그런 이유로써 효율 높은 발전 시설을 소비지에 가깝게 세우는 방안을 추진해야 주장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전 정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하천 유량을 억대 m<sup>3</sup> 단위로 확보했으니 적절하지 않겠는가? 서울 같은 면 여의도나 잠실, 대구와 부산은 낙동강, 대전은 금강, 광주 전남은 영산강의 각 '보'가 원전 입지로 타당한지 검토할 만 할 것이다.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충남도의 대응 방안이 금전적인 보상 성격에 치우치는 인상이 짙음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높은 빈도로 배출하는 발전 사업자에게는 법규에 정한 대로 조업 정지를 명해야 마땅하다. 전력 공급도 공익을 위한 사업 활동이지만 사람의 건강과 환경 보호는 그에 앞서는 근원적인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행적인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충격요법이 필

요하고, 그래야만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든 지방정부든 공공단체는 민간 부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이끌고 자극하는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시급하게 총 전력 사용규모를 줄여야 한다. 전력 소비 증가세를 방지하면서 예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이 타당한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전력 생산 규모 확대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세워야 마땅하다.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로 빈대, 모기, 거머리, 흡혈박쥐, 드라큘라 따위를 꼽는다. 전기도 에너지로 근원을 따지면 지구에서 뽑아낸 것으로 사람으로 치면 소중한 피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전기 포식중에 걸린 나머지 흡전귀(吸電鬼)가 되어 어머니 지구와 미래 세대, 우리 후손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성할 일이다.



(사진: 충남 당진 채운벌. 겨울철새 기러기 떼와 당진화력 송전선로, 2015년 1월)